

제 5178호 2000년 11월 25일 창간

homae.co.kr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음력 5월 15일)



화물연대 파업에 자동차 수출 비상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12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광명스피돔 주차장에 항구로 옮기지 못한 수백대의 기아자동차 수출용 차량들이 가득 세워져 있다.

/뉴스

“반도체 학과 증원, 지역대학 우선해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수도권 중심 정원 증원’ 반발
정치권 “국가균형발전 무시...상생방안 수립 필요”

반도체·AI(인공지능)를 ‘5대 신(新)경제지구’ 공약의 핵심 인프라로 제시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SNS를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당선인은 지난 10일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입학 정원 증원을 검토 중인 정부 움직임에 대해 “지역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강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은 꼭 필요하나 수도권 정원 증원을 맡겨선 안 된다”며 “수도권 대학은 기존처럼 기업과 대학이 ‘계약학과’ 방식으로 정원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을 살리고, 균형발전으로 가는 길은 지역 대학을 살리고, 산업을 키우는 것이며, 지역 대학의 졸업생이 산업에 공급돼야 지역이 살 수 있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입학정원 증원을 잘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방향은 지역대학이 우선하고, 부족하면 수도권 대학으로 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첫 단추를 잘 채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대학정원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지

역을 우선에 두자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그래야 169석의 애당 협조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자문위원회 출범 사실을 알리며 인공지능(AI) 전문

가인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김양현 전남대 철학과 교수, 자문위원으로는 김영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외부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광주 지역 정치권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을 검토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지방 대 위기를 재촉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 갑)·윤영덕(광주 동구 남구 갑) 의원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인력양성은 수도권 대학만 가능한가”라며 “국가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지방대 위기를 재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발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만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위험한 발상이지만,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윤정부의 무개념 국정운영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부터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대 살리기와 지역 균형발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몰상식한 행태”라며 “지방대와 첨단분야 전체가 상생하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건축물 골조 공정의 핵심인 콘크리트 타설 공사부터 차질이 불가피하고, 결국은 모든 공정이 순차적으로 멈춰질 수밖에 없다고 건설업체는 호소한다. 파업에 대비해 각 건설사가 미리 확보·비축한 자재 물량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 현장이 다음주께 ‘공사 중단’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한 건설업 종사자는 “가뜩이나 시멘트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목재·철근·(유로폼) 거푸집 등 다른 건축자재도 대부분 화물차로 조달하기 때문에 수급이 더욱 어렵다. 다음주부터는 콘크리트 타설 공정부터 중단되는 현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량, 자재 물동량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비축 자재 가량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도 다음주부터는 공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한다”고 했다. /김용범 기자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이번주 결정

“소규모 조사, 항체가 실제 감염자보다 ↑”

정부가 오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이번주 결정하는 가운데 해제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막바지로 이어지는 만큼 실제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정부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한 이후 지난달 23일부로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기상조라고 판단, 논의를 4주 미룬 바 있다.

6월 들어 유행 지표는 안정적인 편이다. 감소세는 문화되는 추세지만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0명 안팎, 사망자 수는 20명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 등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은 10%를 밟고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항체 양성률이 실제 감염자 비율보다 높다는 점 역시 격리의무 해제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소규모 양성을 조사하는 실제 감염자보다 항체 양성률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GGM, 공동복지 올인 2면

선관위, 돈봉투 과태료 50배 3면

경기 침체, 한국 경제 위기 4면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



010-6265-0057